

4월은 기억하고 추모하는 달

최민 상임활동가

최민: 이번 달은 4월 16일 세월호참사 12주기,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는 4월을 맞아 모두가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참사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용현: 세월호참사 후 어느덧 열두 번째 봄을 맞이했는데요. 세월호참사를 기억한다는 건 그날 희생되신 304명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마음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향한 다짐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2년간 계속되어 온 기억 투쟁

최민: 2014년 세월호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소외돼 온 생명 안전의 문제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사회적 참사를 그동안 어떻게 기억해 왔고, 애도해 왔는지를 돌아보고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문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대규모 사고, 사회적 참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는 사고 직후부터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유가족과 함께하는 목소리와 행동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가족과 추모 행동을 향한 공격도 있었고요. 이후 재단, 가족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활동을 지속하고 계시잖아요. 추모 사업도 진행하고, 세월호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는 영화나 영상 같은 예술활동이나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세월호 선체라든가 416 기억 교실 등 우리의 기억을 되새기는 자리들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현: 이런 활동들이 추모란 무엇인가, 기억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계속 묻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16일 ‘세월호참사 12주기 기억식’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죠. 기억식 행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세월호참사 온라인 기억관’도 항상 열려 있다고 합니다. 12년 전 그날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 304명의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민: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도 비로소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현: 그런데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일터를, 모두의 일상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사회가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는 점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 어쩌면 세월호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우리 사회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결과가 그 뒤에도 반복되는 재난참사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적 참사를 개인의 문제로 가두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공적인 추모와 애도를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아픔으로 기억하고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길을 사회적 책임으로 약속하는 자리가 그래서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의 죽음도 ‘참사’의 무게로

용현: 이번에는 시민재해에 이어서 노동재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의 죽음을 우리 사회가 대하는 태도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민: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산재 현황,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거든요.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2024년 589명 대비 2.7%(16명)이 증가했다고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공식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전년 대비 14.5%나 급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2026년 1분기에는 재해조사 대상 산재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는 점이에요.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용현: 2026년 사고사망자가 줄어든 건 소규모 건설 사업장의 추락 사망이 줄어든 게 주효했다는 분석을 보았습니다. 큰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작은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를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반월시화공단에도 작은 사업장이 정말 많은데 정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최민: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이나 사업구조부터 정부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작은 사업장들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하단부에 자리하고, 원청



▲ 2026.4.10. 단원 FM 노동 이슈 전문 프로그램 '월담의 노동이수다'를 진행한 최민, 임용현, 이미숙(왼쪽부터). 사진: 월담노조

에 납품 기일을 맞추느라 적은 인원으로 서둘러 일하는 게 '기본값'이잖아요. 그런데다 원청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한 행태도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엔 작은 사업장의 안전 인프라 구축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현: 방금 말씀해 주신 문제들이 맞물려서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거겠죠. 하청/부품사들의 취약한 안전망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사업장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때잖아요. 그런 만큼 산재 예방 대책이 현장 구석구석에 가닿을 수 있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민: 기억과 추모, 애도는 단지 대규모 재난참사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재난참사를 마주하는 원칙을 배웠다면, 일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과연 충분히 애도하고, 일터의 죽음을 불러온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깊이 헤아려 보는 시간을 만들어 왔는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현: 4월 22일 아리셀 대표가 향소심에서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 7년으로 대폭 감형받은 것은 우리 사회의 이런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화재 매뉴얼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면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모순적인 판결문을 보세요.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데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를 약화시켜 노동재해 참사의 재발을 부추기는 판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사망사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노동과 노동안전에 대한 사법부의 왜곡된 인식을 바꾸는 '사법개혁'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일터**